

의 정 정 보

2005 - 8

4. 29

목 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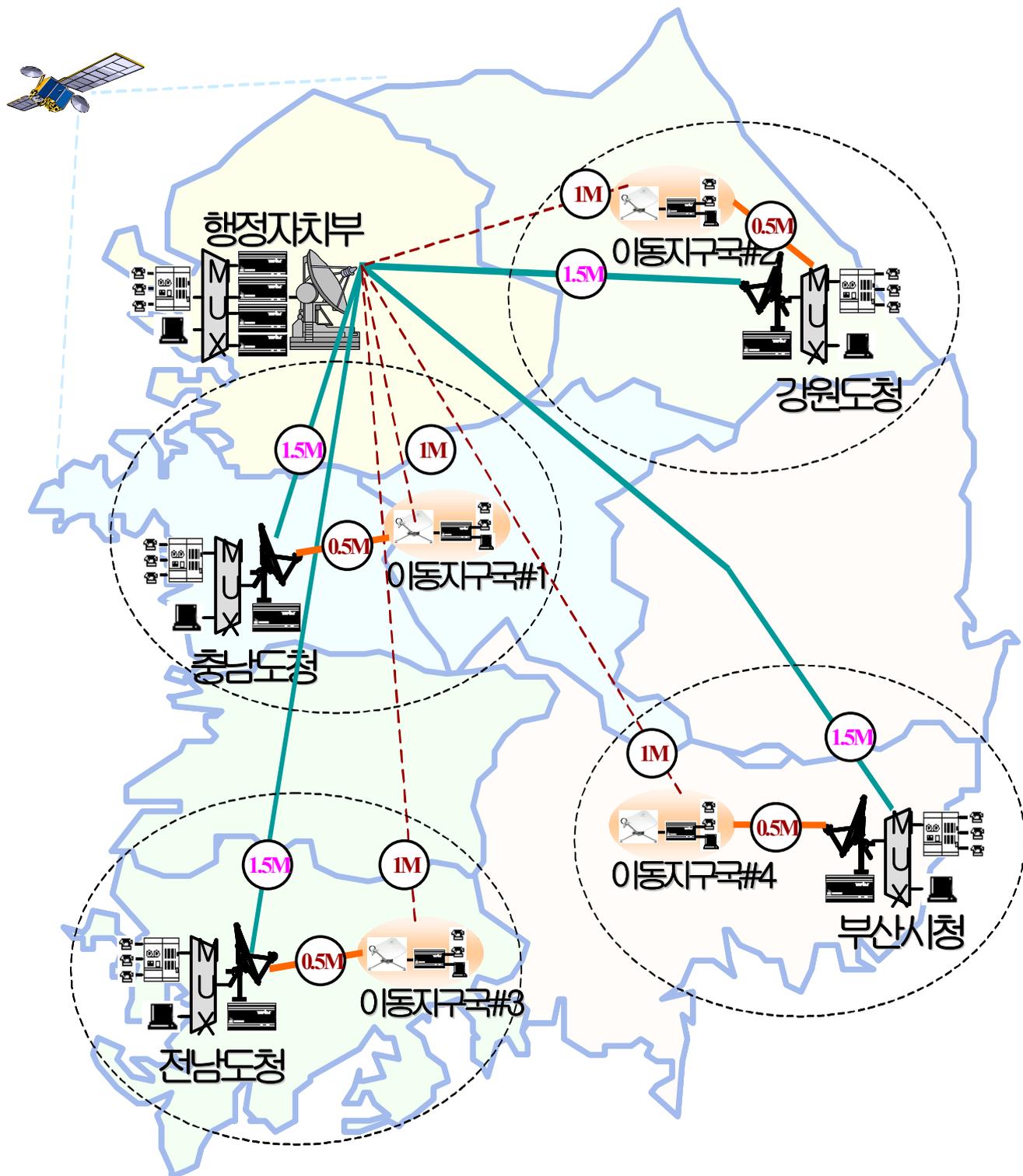
I. 중앙기관 정보	1
II. 타 시·도 의회동향	9
III. 새로 개정된 법령	10
부 록 : 행복한 책 읽기	12

I. 중앙기관 정보

① 행정자치부, 재난·재해용 인공위성 통신망 구축

- 행정자치부는 재난·재해 등으로 주민 고립시 신속한 위성통신망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전국 행정전화망의 비상통신망 구축사업을 완료하였다.
- 이는 매년 되풀이 되는 이상기온과 홍수로 인해 행정전화망이 두절되는 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안정적인 행정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비상대책 수립을 하게 된 셈이다.
- 비상 행정전화망은 전국 권역을 4개지역(충남, 강원, 부산, 전남)으로 분리하여 이동형 위성장비를 설치하였으며 530개 행정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.
- 이동형 위성장비란 이동형 차량에 위성안테나를 탑재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공위성과 즉시 연결하여 비상용 행정 전화를 구성할 수 있는 장치이다.
- 또한 산간 오지지역의 재난·재해 등 전화가설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송·수신이 가능하다.
- 행자부에서는 금년 우기철에 대비하여 전국적인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지자체 공무원에 비상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표준운영 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으로 재난·재해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.

<참 고> : 통신위성망 구성도



② 행자부, 개인별 부동산 파악 가능한 부동산정보관리센터 구축

- 행정자치부는 부동산 보유현황을 개인별·지자체별로 연중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정보관리센터 구축사업을 완료하였다.
- 부동산정보관리센터에서는 전국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개인별·세대별 부동산 보유현황, 소유권 변동사항과 보유세 과세현황을 한눈에 파악관리하고,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를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.
- 부동산정보관리센터는 '03.10.29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부처별로 각각 보유하고 있는 토지·건축물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종합 관리하면서 부동산 정책결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정보를 생성하여 관련 부처에 제공하고, 부동산 대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구축한 것이다.
- 따라서, 개인의 전국 부동산 소유현황과 그 과표액·세액을 한눈에 파악하여 관련부처에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적기에 효과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었다.
- 예를들어 최근 부동산 대책이 필요한 판교지역의 경우 지난 몇 년간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사람과 취득면적·가격을 파악하고 연도별로 취득시점을 분석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제공이 가능하게 된다.
- 이번에 개발한 정책자료 제공시스템은 전국의 토지·건물 소유분포 현황, 연령대별 소유현황, 소유구분별 변동현황, 거주지별 외지인 소유현황, 부동산 과세현황, 부동산 상세현황 등의 조회 및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.

③ 보건복지부,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추진

- 보건복지부는 금년 7월부터 실시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을 충남 부여군, 수원시, 광주광역시 남구, 강릉시, 안동시, 북제주군 등 6개 지역을 1단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다.
- 노인요양보장제도에란 치매·중풍 등 만성질환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사회 공동책임으로 부담하는 보건·의료·요양·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장기간 제공해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. 이는 일종의 사회보험으로 질병치료 목적의 건강보험과는 별개로 운영된다.
- 노인들은 시·군·구(혹은 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)에 신청, 등급판정을 거쳐 자신의 상태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정기적으로 등급재판정을 받아야 한다.
- 요양보험이 제공할 서비스는 ▲방문간병, 일상생활 지원 및 수발, 방문목욕, 주·단기보호, 재가요양관리지도 등 재가서비스 ▲요양시설, 전문요양시설 등 시설입소를 통한 기능회복, 재활 등이다.
- 지금까지 이같은 서비스는 그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일부 저소득층에 한정돼 있었으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일반·중산층 등 모든 계층의 노인에게로 확대된다.
- 우선 2005년과 2006년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검증을 거친 후 제도 도입 1단계인 2007년에는 65세 이상의 최중증 대상자와 중증 중농어촌·부조 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.
- 또 2009년에는 중증까지(농어촌 및 부조대상자는 경증), 2011년에는 65세이상 전체 대상으로 확대하며, 전면 실시단계인 2013년에는 45세 이상 노인성 질환자에까지 단계적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한다.
- 시설 이용에 따르는 비용도 20% 수준(월 150만원 → 30만원)만 부담하게 되는 등 노인가정의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.

4 보건복지부, 건강검진제도 개선

-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검진이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건강관리의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건강검진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하였다.
- 현행 건강검진제도는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각 부서별로 건강보험 대상자의 건강검진, 암 조기 검진, 노인건강검진, 임산부·영유아 건강검진 등이 각각 개별사업으로 실시됨으로써 검진사업간의 연계 미흡으로 인한 일부계층의 누락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다.
- 또한, 현행 건강검진제도는 나이·성별과 무관하게 획일된 검진 항목을 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한 검사를 하거나 필요한 검사가 제외되는 등 검진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였다.
- 이에 따라, 일부 계층에서는 고가의 병원 검진을 선호하게 됨으로써 검진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, 일부 저소득층에게 소외감을 가져다주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하였다.
- 따라서,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/F 구성·운영을 통하여 건강검진제도의 개선안 및 권고안을 2006년도에는 제시할 계획이다.

<참 고> : 생애주기별 건강진단(안)

구 분 생애주기	검 사	진찰(기본진찰 외)	질병위험요인 관리(상담·교육)	기 타
산 전	초음파·임신성 당뇨· 매독·풍진검사· 염색체이상 선별검사 (다운증후군 검사)	산전 진찰	금주·금연	
신 생 아 (1개월 미만)	선천성 대사이상	선천성 고관절탈구 발달단계 검사		예방접종 연계
영·유아 (0~6세)		선천성 고관절탈구 발달단계 검사 시력·사시검사 청력검사 구강검진	사고 위험요인 제거 등 예방 구강 관리	예방접종 연계
소 아 (7~13세)	결핵검사	구강 검사 척추 측만증	사고 예방	
청 소 년 (14~19세)	결핵검사		사고·자살예방 성병 예방 금연, 비만	
청 년 (20~39세)	간암(고위험군) 자궁경부암 유방암 (여자) 고혈압·당뇨, 결핵	안저검사 (당뇨군·고혈압군)	고혈압, 당뇨 성병예방, 금연 절주, 비만	산업장별 건강문제 고려
장 년 (40~65세)	위암·대장암 등 고지혈증 심·혈관질환	안저검사 (당뇨군·고혈압군)	고혈압, 당뇨, 비 만	산업장별 건강문제 고려
노 년 (65세 이상)	골다공증 전립선암 심·혈관질환 심방세동 신장질환검사	시력·안압검사 청력검사 치매검사 우울증검사	낙상 및 골절 구강 관리	

⑤ 문화관광부,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5곳 신청발표

- 문화관광부는 지난 4.15까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을 접수한 결과 전국에서 5개 지역이 신청했다고 발표했다.
- 문화관광부가 밝힌 구체적인 시범사업 신청 지역은 현대건설과 태안군이 신청한 『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』, 전경련 컨소시엄 등 18개 국내외 기업과 전남도가 신청한 『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』, IBN홀딩스와 사천군이 신청한 『남해안 국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』, 대한전선과 무주군이 신청한 『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』, 동서화합주식회사와 광양시·하동군이 신청한 『관광레저 문화신도시』 등 5개 지역이다.
-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지난해 12월 제정·공포된 ‘기업도시개발 특별법’에 따라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문화·관광·레저 스포츠와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이 복합적으로 조성되는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.
- 지자체에서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지역의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,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발전의 최적 수단으로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할 민간기업 유치를 추진해 왔었다.
- 문화관광부는 이번에 신청한 지역에 대해 앞으로 국토연구원,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합동평가단을 구성하여 ▲지역 낙후도 ▲조기 가시화 가능성 ▲지역 특성 부합 및 실현 가능성 ▲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여, 기업도시위원회(위원장 : 국무총리)의 심의를 거쳐 6월 중에는 최종적으로 시범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.

<참 고> :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신청 현황

구 분	제 안 내 용
태안 관광·레저형 기업도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 치 : 충남 태안군 태안읍 천수만 일원 ○ 개발면적 : 4,727천평 ○ 개발기간 : 2005 ~ 2010 ○ 제 안 자 : (주)현대건설 (공동제안자 : 태안군수) ○ 도입시설 : 스포츠파크, 테마파크, 청소년 레크레이션파크, 아카데미타운, 생태 체험공원 등
서남해안 관광 레저도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 치 : 전남 해남군 산이면, 영암군 삼호읍 일원 ○ 개발면적 : 30,315천평 ○ 개발기간 : 2005 ~ 2017 ○ 제 안 자 : 전경련 컨소시움 등 국내외 18개 업체 (공동제안자 : 전남도지사) ○ 도입시설 : Educational Town, Golf Town, Vegas of Town, Wellness Town, Tourism Zone/Ocean Marina, F1 경기장, 테마영상단지 등
남해안 국제관광 레저형 기업도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 치 : 경남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, 탑리, 반용리 일원 ○ 개발면적 : 2,000천평 ○ 개발기간 : 2005 ~ 2010 ○ 제 안 자 : 주식회사 아이비엔관광레저개발 (공동제안자 : 사천시시장) ○ 도입시설 : 회원제·대중골프장, 클럽하우스, 골프아카데미, 콘도, 펜션, 승마장, 워터파크, 업무/연구시설, 지원시설, 화훼식물원, 주거단지 등
무주 관광·레저형 기업도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 치 : 전북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, 금평리, 덕산리 일원 ○ 개발면적 : 2,489천평 ○ 개발기간 : 2005 ~ 2015 ○ 제 안 자 : (주)대한전선 (공동제안자 : 무주군수) ○ 도입시설 : 골프장, 콘도, 워터파크, 스파, 캠핑장, Retirement Village, R&D Villa, Street Mall, 교육시설, Business Town, Research Park, 주말농원, 생태학습장 등
관광·레저 문화 신도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 치 : 전남 광양시 다압면 일원,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일원 ○ 면 적 : 8,410천평 ○ 기 간 : 2005 ~ 2015 ○ 제 안 자 : (주)동서화합개발, 한신공영 등 컨소시움 (공동제안자 : 광양시장, 하동군수) ○ 도입시설 : 호텔/카지노, 골프장, 콘도, 마리나시티, 스포츠승마시설, 문화센터, 전문교육시설, 영상산업단지, 화개나루터, 등

II. 타 시·도 의회동향

① 경기도의회, '주택조례' 개정으로 아파트 판상형 4호 연립 의무화

- 경기도의회는 일반분양 아파트의 평수에 관계없이 층당 4세대 이하로 건축을 제한하는 '경기도 주택조례'를 개정 통과시켰다.
- 주택조례안에 따르면 종전의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과 재건축단지에 대한 층당 4세대 이하 건축제한 예외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금년 5월부터 신축되는 150세대 이상의 일반 분양 아파트는 물론 모든 임대아파트도 한 층당 4가구까지로 제한된다.
- 또한, 주민들의 주차시비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공동주택은 세대당 1대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300가구 이상 주택 건설시 단지내 주차장중 80%를 의무적으로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.

② 강원도의회, '수도권 규제완화 반대' 성명서 발표

- 강원도의회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법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이후 지방육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수도권 규제부터 대폭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.
- 성명서 주요내용은 ▲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을 일관되게 견지 ▲수도권 규제완화 논의를 전면 철폐 ▲수도권은 적정하게 질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에는 기업 및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한 획기적인 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.

Ⅲ. 새로 개정된 법령

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
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(시행 '05.4.13)

- 제한경쟁입찰 한도액을 일반공사의 경우 50억원 이하 → 70
억원 이하로, 전문공사의 경우 5억원 이하 → 6억원 이하로
각각 상향 조정
- 경쟁제한입찰 대상자인 지역사업자는 일찰공고일 전일부터
입찰일까지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,
특히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관할구역안에 주된
영업소를 두도록 규정

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

- 훈련 성적평정의 대상이 되는 교육훈련의 일원화 및 교육
훈련 이수제 도입(시행 '05.7.1)
 - 평정대상 교육훈련중 공통전문교육훈련과 선택전문교육
훈련의 구분을 폐지하여 전문교육훈련으로 일원화하고
교육이수시 만점을 부여
-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정기적 공개의무화(시행 '05.4.14)
 - 공무원 본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기준
일
로부터 1월 이내에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을

통하여 본인의 명부순위를 통보

③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(시행 '05.6.31)

-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(65세)에 해당되더라도 참전 명예수당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
- 지급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연령에 도달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토록 개정

④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(시행 '05.3.31)

- 도지사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고, 지방의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즉시 기금운용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그 발행절차를 규정
-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 의결에 참여 불가
- 공사는 주택·토지개발의 경우 순자산액의 10배 이내, 그 외의 사업은 순자산액의 4배 이내의 한도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, 이에대한 승인은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도록 그 절차와 내용을 규정

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(시행 '05.7.1)

-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내에서

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연이자를 지급